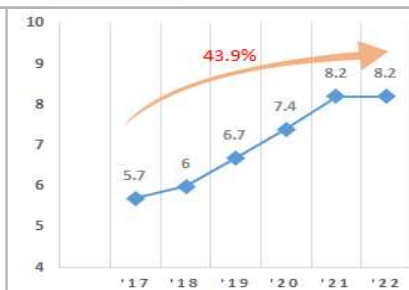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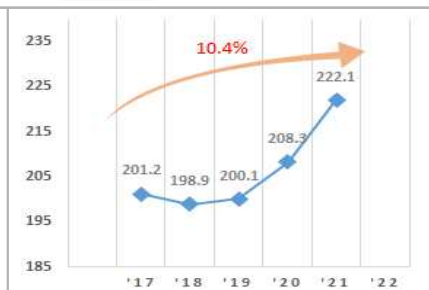


배포 일시	2022. 9. 7.(수)		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	책임자	과장 소성환 (044-201-3123)
	혁신행정담당관실	담당자	사무관 양상모 (044-201-3216)
보도일시	2022년 9월 8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7.(수) 16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‘**윤곽 드러나**’ - 민관합동 TF 운영을 통하여 기관별 혁신과제 발굴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9.7일(수) 새 정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‘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’ 추진 상황을 발표하였다.
-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공정·투명하게 시행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적(公的)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이다.
- 현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개로 약 8.2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, 주거복지·교통SOC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- '21년 말 기준 매출규모는 52.2조원, 당기순이익은 2.6조원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, 부채규모는 222.1조원에 이르며 부채 비율은 152.8%이다.
- 이러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기관의 수, 종사자 수 및 부채규모가 모두 증가하였다.

공공기관 수(5개 증가)

종사자수(2.5만명 증가)

부채액(20.9조원 증가)


- 기관이 비대해지면서 설립목적과 관련성이 적거나 무관한 부분까지
업역을 확장한 사례가 발생하고, 공공기관에 부여된 독점적 지위를
이용하여 불공정한 업무 집행이 발생하기도 하였다.
- 또한, 대규모 예산을 관리하면서 많은 자회사 및 출자회사(총 181개)를
보유하고 있는 만큼 퇴직자의 재취업 등을 통한 이권 관계 형성의
가능성도 상존하고,
- 최근 발생한 부동산 유관 기관의 부동산 투기, 교통 담당기관의 안전
의식 부재에 따른 잦은 사고발생 등으로 국민의 비판을 초래하기도 하였다.
- 이렇듯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놓인 현 상황과 문제인식을 바탕
으로 이번 ‘공공기관 혁신방안’ 을 추진하게 되었다.
- 지난 7월 8일부터 공공기관별 혁신(안)을 검증하기 위해 ‘민관합동
TF’ 를 구성·운영 중이며, 민관합동 TF가 발굴한 혁신과제를 해당
기관에 권고하고, 향후 기관별 최종 혁신(안)을 도출하게 된다.

목 표 : 고품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하 공공기관 실현

- 추진전략 :**
- ①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 차단
 - ② 이권 형성 예방, 복무 기준 강화
 - ③ 행정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
 - ④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 추진

①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 차단

◆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도록, 공공기관의 독점적 정보 또는 지위를
활용한 부당행위 등 사전 차단 필요

- **(한국토지주택공사)** LH 자체 투기행위 조사 및 국토부 부동산거래
정기 조사 시, 조사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·
비속까지 확대하고, 조사범위도 주변지역까지 확대하여 조사의 실효성을
강화할 예정이다.

- 아울러, 취약시기(명절 등) 및 취약분야는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, 부조리 행위 의심정황 확인 시 기동감찰반을 즉시 투입한다.
- **(주택도시보증공사)** 재무건전성, 업계 여건을 감안하여 보증료율 조정을 추진하고, 전세보증 대상 물건의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 우대·할증 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.
 - * (일정) 보증료율 체계 점검, 협회 의견수렴(~11월말) → 보증료율 조정안 국토부 협의 및 관련 규정 개정(12월) → 보증료율 개편 시행('23~)
- 또한,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흡한 내부규정으로 인한 관행적 업무처리, 갑질행위 가능성 등을 전수조사 후 개선작업에 착수한다.
 - * (일정) 제도혁신TF 구성 및 신고센터 개설(9월) → 업계 간담회 등 개선과제 발굴 및 과제확정 → 개선착수(11월~)
- 아울러,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여유자금을 활용한 '사회공헌자금' 편성도 확대한다.
- **(한국도로공사)**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임대료율 체계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.

② 이권 형성 예방, 복무기준 강화

◆ 퇴직자의 자회사, 유관기관 등 재취업을 통한 부당한 거래 행위는 차단하고, 부당 행위에 대한 징계는 강화

- **(이권형성 예방)** 자회사·출자회사 보유 기관은 재취업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,
 - 관련 위원회 위원의 1/2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며, 심사대상 확대 방안*도 검토한다.

* 예시 : (현행) 임원 → (개선) 소 임직원으로 확대

- 또한,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, 계약상대 업체에 퇴직자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등 퇴직자의 재취업 등을 통한 불공정 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
□ **(복무기준 강화)** 부정·부당한 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도 강화한다.

- 성 비위 관련 징계규정이 없는 기관*과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기관**은 이를 신설 또는 보완하고,

* 인천국제공항공사, 주택관리공단, 항공안전기술원,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

** 항공안전기술원

- 영리업무·금품수수 금지 등에 대해 구체적 징계기준 없이 위원회 의결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기관*도 그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.

* 주택도시보증공사,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

□ **(공공기관 상시 복무관리 시스템 마련)** 국토부와 산하기관 감사부서 합동으로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고 수시 공직복무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한다.

- 또한, 국토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, 기관별 현안을 공유하고 복무관리 중점 추진사항을 전파할 예정이다.

- 정규직 전환 자회사의 방만 경영* 방지를 위해 모회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, 점검 결과와 평가체계를 연계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.

* (KAC 사례) 경비의 인건비 편법 전용, 종사원 근태 관리 미흡 등

3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

◆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, 불미스러운 사건과 분쟁 등을 예방

- **(국가철도공단)** 턴키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, 기술검토 및 설계평가 회의 등 평가 과정 일체를 생중계한다.
 - 평가항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별로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정성적 평가 항목은 축소하고 정량 지표 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.
 - 또한, 심의 위원별 심의 건수를 연간 2회로 제한하고 위원회는 동일 학교(例 : 철고, 철도전문대, 철도대학) 출신이 전체의 30%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.
 - 턴키 평가위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, 특정 평가위원이 다수의 안전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력 POOL은 확대하고,
 - 설계용역 수주실적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상위 5개 업체를 ‘공동도급 제한 업체’로 선정, 이들 업체 간의 컨소시엄 구성은 제한할 예정이다.
- **(한국토지주택공사)**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하여 경쟁방식을 확대하고, LH 퇴직자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도 확대(감평사 : 퇴직후 1년 → 2년)한다.

< 수의계약 기준 강화 방안 >

구 분	현행 기준	개선
감정평가사	추정평가액 100억 미만	추정평가액 50억 미만
변호사	착수금 5천만원 이하	착수금 2천만원 이하
법무사(개선완료 '21.12)	200인 미만 사업지구	100인 미만 사업지구

- **(주택도시보증공사)** 안전한 임대차를 위한 정보 제공과 국민들의 보증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‘전세계약 플랫폼(안심전세APP)’을 신속 도입한다.

* 적정 매매·전세가격 확인, 건축물 정보, 비대면 보증·이행 서비스 제공 등

- **(한국부동산원)** 공시제도의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,
 - ‘23년 공시부터는 표준주택 물량 확대 및 외부 검증 강화를 추진하고, 공시 정보 열람 前 지자체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.

- 또한, 공시 관련 업무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, 산정근거 공개 확대 및 산정체계·방식·주기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.

* 관련 연구용역('22.6~'23.5)을 통해 '23년 하반기에 후속조치 추진

- **(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)** 체계적인 R&D 관리를 위해 도입한 일괄공모 방식이 참여 연구기관의 폐쇄성, 신진연구자 참여제한 등 부작용을 발생시킴에 따라,

- 연구내용별 연계성, 연구성과 간 유기적 결합 필요성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분리가 가능한 과제는 세분화하여 분리공모를 추진*한다.

* '23년 신규 R&D 사업 20개 중 최소 4개 사업(20%) 이상 분리공모 추진

- 또한, 신진연구자 육성을 위하여 연구자 주도형 자유공모식 R&D, 소규모 R&D도 적극 발굴한다.

4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

1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

◆ 일부 기관은 지나치게 비대해지거나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까지 수행하여,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

- **(한국토지주택공사)** 국민 주거생활 향상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하여,
 -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적은 집단에너지사업, PF사업 등은 조속 폐지 하고 주거급여조사 등은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로 이관을 검토한다.
 - 경영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 등은 단계적으로 정리(20개)하고, 인력의 49%가 현업과 관련성이 적은 별도 업무를 수행중인 임금피크제 운영*에 대한 효율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.

* 임금피크제 인력 현황 : 2급 이상(550명) ⇒ 현업수행(85명), 별도직무(465명)
3급 이하(394명) ⇒ 현업수행(394명)

-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교통량 예측 정확성 제고, 광역교통개선대책비 조기 집행방안을 마련하여, ‘先교통-後개발’ 체계도 정립할 계획이다.

* 세부방안은 관련 연구(‘22.7~’23.5)를 통해 구체화, 「광역교통법」 개정 등 제도개선(’23.~)

- 아울러,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펼친다.
- 3기 신도시 내 임대주택은 역세권에 약 60%를 배치하고, 평균면적도 최초 지구계획*보다 확대할 예정이다. 마감재**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하고 아파트 브랜드명은 입주민 희망시 변경이 가능토록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.

* 최초 평균 면적 : (부천대장) 15.0평, (남양주왕숙) 15.3평

** (既 개선) 도어락, 건조대 등 → (추가 개선) 샤워부스, 수납공간(펜트리) 등

- **(한국철도공사)** 철도안전체계의 개선을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은 사전에 최소화하면서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.

-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철도안전이 운영효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철도안전체계 개선을 추진한다.
- 국가사무인 철도관제·시설유지보수 업무수행 체계를 심층 진단하고,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- 또한, 열차 내 화장실 악취 개선,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및 수유실 냉방시설 확대, 짐칸 CCTV 설치 등 서비스 품질 제고도 추진할 계획이다.

- **(한국도로공사)** 국토부에서 위탁해 수행중인 국도 ITS 운영·관리 업무는 국토부(지방국토청)로 환원하고, AI, IOT와 접목한 스마트 도로 관리를 실현하여 고속도로 유지·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.

② 기관 본연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업무에 대한 조정

- ◆ 기관 업무와 관련성이 낮거나 민간(타 기관 포함)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는 이관 검토

□ **(한국교통안전공단)** 교통약자서비스 종사자교육 등 8개 법정교육*은 민간 (他 기관)에 개방하고,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업무**는 이관을 검토한다.

* 경제운전교육,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, 튜닝교육 등

** 건설기계 조종사 경력관리, 택시미터 제작 검정, 자동차 온라인 등록 대행 등

□ **(한국부동산원)**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, 토지재결정보시스템 등은 민간 이양을 추진하고,

○ 부동산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네이버 등과 공유·협업하여 매물거래 성사 소요기간, 주택거래 회전을 등 신규통계도 생산할 예정이다.

□ **(한국국토정보공사)** 공사가 수행하면서 일부 공정만을 민간에 대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민간의 분담비율(現 35%)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,

○ 공간정보 DB구축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의 관행적 수의계약은 지양한다.

□ **(인천공항공사)** 인천공항과 용유역을 운영하는 자기부상철도는 이용객이 예측 수요 대비 11%* 수준에 불과하여 운영방식을 개선하고,

* '19년 예측수요는 日 평균 약 36천명이었으나, 실제 이용객은 약 4천명에 불과

○ 인천공항과 인근지역에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에너지 전문 기관 등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.

□ **(한국공항공사)** 무안·양양공항에서 수행중인 항공기 취급업은 해당 업역의 시장규모 확대 후 민간에 이양을 추진한다.

□ 김홍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“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.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국민 속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을 것”이라며,

○ “국토교통부도 산하 공공기관이 새로이 혁신해 나가는데 함께하며, 즉시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” 고 밝혔다.

주요 산하기관별 담당 부서

산하 기관명	담당부서 및 연락처
국토 분야	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팀장 김혜진 (☎044-201-3252) 사무관 양윤정 (☎044-201-3261)
	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기금과 과장 정진훈 (☎044-201-3337) 사무관 배기훈 (☎044-201-3339)
	③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정책과 과장 김명준 (☎044-201-3398) 사무관 최규용 (☎044-201-3410)
	④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평가과 과장 이랑 (☎044-201-3422) 사무관 권오혁 (☎044-201-3424)
	⑤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정책과 과장 윤종수 (☎044-201-3458) 사무관 장현진 (☎044-201-3459)
교통 분야	⑥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책과 과장 장구중 (☎044-201-3230) 서기관 배성희 (☎044-201-3865)
	⑦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 항공정책과 과장 김홍락 (☎044-201-4204) 사무관 김영건 (☎044-201-4180)
	⑧ 한국도로공사 도로정책과 과장 한명희 (☎044-201-3875) 사무관 서지웅 (☎044-201-3879)
	⑨ 국가철도공단 철도정책과 과장 박병석 (☎044-201-3938) 사무관 김재돈 (☎044-201-3942)
	⑩ 한국철도공사 철도운영과 과장 김민태 (☎044-201-3970) 사무관 류윤하 (☎044-201-4774)